

알기쉬운 FTA 농업협상

농림부 자유무역협정과

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

WTO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국제교역질서를 주관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의 규범은 148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며 회원국 간에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어떤 회원국에 대해 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40%로 결정했다면 이 40%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끼리만 관세를 철폐하는 등 다른 국가와는 차별해 특혜를 주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협정입니다.

예를들면,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 옥수수 관세를 40%로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FTA를 맞은 특정국가에 대해서는 옥수수 관세를 철폐하거나 40%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해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FTA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을 똑같이 취급하는 WTO의 다자무역질서에 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지역주의확산과 FTA 확대

FTA는 2개국 또는 일부 국가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입니다. 최근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9년 동안 176건의 FTA가 체결됐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2005년에는 세계 총 무역중 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 FTA가 포함하는 분야

FTA는 참여하는 나라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FTA는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을 전후로 FTA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비스 분야와 해외자본의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2. FTA 왜 확산되고 있나?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다자무역체제인 WTO에서는 많은 회원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소수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 FTA 협상에 임하는 나라의 기대 이익은 다양하고 직접적입니다.

FTA를 체결하면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각국의 무역정책에서 중요한 개혁조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FTA를 맺은 나라간에는 무역이 활성화되고 해외자본의 투자가 확대돼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FTA는 참여한 국가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에 비해 실리를 챙기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DDA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은 참여하는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합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서 소외될 경우 입게 될 반사적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들은 FTA를 체결한 국가끼리 무역을 대폭 자유화하는 것이 DDA 협상과 같은 다자체제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DDA 협상이란?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써 농업·비농업·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친 세계 무역질서를 논의하고 있는 협상입니다.

나. 지역주의를 억제할 장치가 미흡하므로 FTA는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WTO는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은 다자무역체제와는 상반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한편 WTO는 지역무역협정의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이처럼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WTO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의와 FTA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전망입니다.

3. 우리나라는 어떻게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나?

가.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추진합니다.

나라살림의 70%를 무역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FTA에 뒤늦게 뛰어든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도 아세안, 싱가포르, 멕시코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확산추세에서 비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나. 내용면에서는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합니다.

정부는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합니다.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폭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WTO 규범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동시에 무역과 관련한 각종 국내제도의 개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FTA를 추진합니다.

시장개방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체제를 선지화하는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는 2004년 6월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제정했습니다.

FTA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FTA 실무추진회의-FTA 추진위원회-대외경제장관회의'로 이어지는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국민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FTA 추진위원회 산하에 업계와 학계 대표자로 구성된 'FTA 민간자문회의'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FTA 추진 단계마다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FTA 협상개시 결정 이전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 규정이란?

자유무역협정체결규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추진기구의 구성, 운영, 체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입니다.

라. 발효중이거나 협상이 끝난 FTA

① 한-칠레 FTA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지난 2004년 4월 1일 발효했습니다. 양국이 품목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농업부문에서 쌀·사과·배 등 민감 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부 농산물은 5~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② 한-싱가포르 FTA

2004년초에 시작된 협상은 10여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4년 11월말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협상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005년 8월 양국 정부가 협정문에 정식 서명해, 2005년 하반기에 발효할 것을 목표로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인근의 농업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들어올 가능성을 고려해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 세이프가드제도 등 보완장치를 강화했습니다.

③ 한-EFTA FTA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2005년 1월 협상을 시작해 7월에 타결했습니다. EFTA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농산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김치 등 전통 가공농산물의수입개방을 EFTA가 받아들여도 좋으므로써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마. 협상이 진행 중인 FTA



① 한-일 FTA

일본과는 2003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 12월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개방 범위 등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으며 냉각기를 갖고 있습니다/

② 한-ASEAN FTA

2005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2년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단 2005년말 까지 상품분야 협상을 마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2009년까지 최소 80%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빠른 일정으로 ASEAN과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ASEAN 10개국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③ 한-캐나다 FTA

캐나다와는 2005년 7월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9월까지 2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 전에 있었던 예비협약에서 농수산물의 경우 폭넓은 관세철폐를 추진하되 상호 민감분야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바.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FTA

- 미국과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양국 정부간 예비협의를 3차례 개최했습니다. 양국은 협상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향후 진행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멕시코와는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2004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했고, FTA 보다는 개방 정도가 약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ry Agreement)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도와도 멕시코와 비슷한 방식으로 “ 포괄적 경제파트너쉽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위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가 참여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2005년 5월 공동연구를 시작했습니다.
-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FTA는 2003년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이와 별도로 2005년 3월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했습니다.
- 이외에도 이스라엘, 페루, 파나마,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등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4. 농업부문은 어떻게 FTA에 대응하고 있나?

FTA 농업부문 협상은 국내 농업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을 자유화하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쌀, 사과, 포도, 배추 등 우리 농업의 뿌리가 되는 농산물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농업의 특수성을 배려해 민감 품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중 민감한 품목은 FTA를 체결하더라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협상결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내보완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선대책·후협상”을



통상협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 외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했고, 철저한 원산지기준을 설정해 우회수입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이프가드제도란?

세이프가드(Safeguard)제도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이해당사국인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사전협의를 적용기간에 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시행합니다.

나. 농업인, 품목단체, 전문가 등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품목단체, 가공 및 유통업체, 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품목단체 농업통상자문회의」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해 FTA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각 지역의 농업인,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설명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정책고객서비스란?

정책고객서비스(PCRM :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란 민간의 CRM 개념을 정부의 정책에 적용한 것으로, 정책분야를 나누어 정책고객인 국민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 동시다발적 FTA에 대비한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자유무역협정과를 신설해 FTA 농업협상을 위한 조직을 보강했습니다. 농업경제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각 FTA별로 농업에 대한 영향분석, 협상전략수립, 상대국 농업정보 수집 등을 위한 협상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전문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5. FTA 농업협상의 영향과 대책은?

FTA는 쌍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므로 한쪽이 모든 산업부문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농업경쟁력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므로 FTA 자체가 우리 농업에 위협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와 FTA 협상을 하고 있거나 협상개시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농산물 수출강국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런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가. FTA가 체결되면 농업부문의 자유화는 불가피합니다.

원칙적으로 FTA는 모든 산업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업부문도 자유화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제 통상무대에서 식량안보, 농촌사회 유지 등 비교역적인 기능을 인정받아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WTO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개방의 파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현실 속에서 무조건 보호만 외친다고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도 농업인들이 시장개방 확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 정부는 FTA 확산에 대비해 FTA 이행지원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칠레와의 FTA 체결을 계기로 정부는 'FTA이행지원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향후 확산되는 FTA에 대비해 농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2010년까지 FTA 이행지원기금 1조2천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는 한·칠레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948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2005년에는 1천6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및 유통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UR이후 추진돼 온 농업농촌지원대책의 잘잘못을 살펴 미래를 좀더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첫째, 경쟁력이 있는 농가를 집중 육성해 농업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둘째, 논농업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친환경축산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해 농가의 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셋째,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의료 등 복지서비스와 농어민연금·건강보험·기초생활보장제도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계획은 3년 단위로 그 구체적 내용을 조정하면서 추진함으로써 정부와 농업인이 힘을 합쳐 농업농촌을 희생시키는 기회로 살려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년간 119조를 투입하는 중기재정계획은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FTA 이행지원특별법, 부채경감법, 삶의질향상특별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등 4대 특별법도 2004년 2월 이미 마련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 농업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FTA 이행지원특별법 등 4대 특별법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농업인 여러분들의 노력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정책을 9대 분야, 180여개 과제로 나눠서 검토하고, 농업인·농업인단체·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농업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생산지에서 땀 흘리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 생산자·가공·유통·수출업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목단체 농업통상자문회의'를 만들어, 정보를 함께 나누고 공동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등은 바로 정부가 농업인의 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고 있는 직접적인 사례입니다.

6. 한-칠레 FTA 그 이후...

가.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지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칠레 농축산물의 수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들어 칠레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는데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6%가 증가했습니다.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은 돼지고기, 포도, 포도주, 키위 4개 품목으로 이들 4개 품목이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 71백만불의 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 돼지고기는 38백만불, 포도는 19백만불, 포도주는 6백만불, 키위는 5백만불이 수입됐습니다.

나. 한-칠레 FTA의 영향을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일부에서는 칠레와의 FTA 후 농업부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도 농업부문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칠레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감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은 검역 문제로 수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수입물량 변화에서도 보듯이 농축산물의 수입증가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돼 나타날 것이므로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는 성급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칠레와의 교역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 한-칠레 FTA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한-칠레 FTA 국회 비준동의 과정의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당장 농업이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부문이 집단적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5개월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떤 주장일지라도 극단에 치우친다면 농업의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FTA 체결을 추진할 때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부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에게서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농업인들 중에서도 국가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농업부문도 감내해야 할 몫이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업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농촌의 현실과 농업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지를 얻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농업이라는 생명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필요성에 대해 간과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다시 한 번 농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라. 앞으로의 FTA,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농업인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FTA가 우리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FTA는 농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과거의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재연될 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말을 늘 하는 이야기로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FTA 체결 확대 및 진행 중인 DDA 협상 등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FTA,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 끝 -

